

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영학자의 제언

2014년 8월19일

이장우

한국경영학회장

정부정책에서의 경영학적 사고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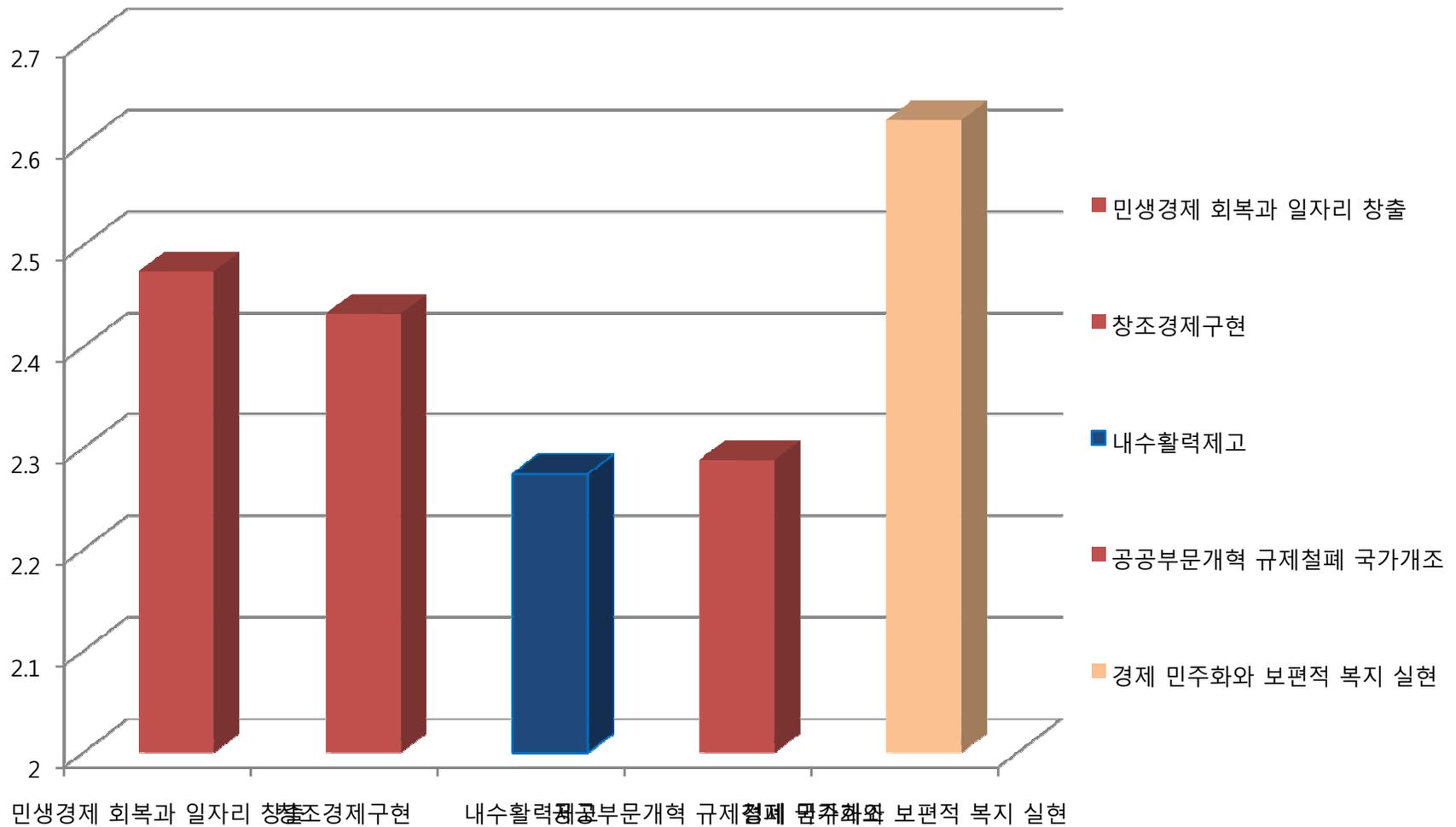
- 정책소비자와 수요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
- 정책실행 프로세스 비효율화 개선 필요
- 정책 유효성 향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

경영학자의 시각 설문조사

- 2014년 7월 사전 인터뷰 및 설문문항 작성
- 현정부 경제정책, 한국경제 주요이슈, 해법, 새 경제팀 정책평가 등 온라인 설문
- 2014년 8월5일-8월9일 실시
- 경영학회원 215 명 응답 (박사 86.51%, 석사 10.70%)

1. 현정부 경제관련 성과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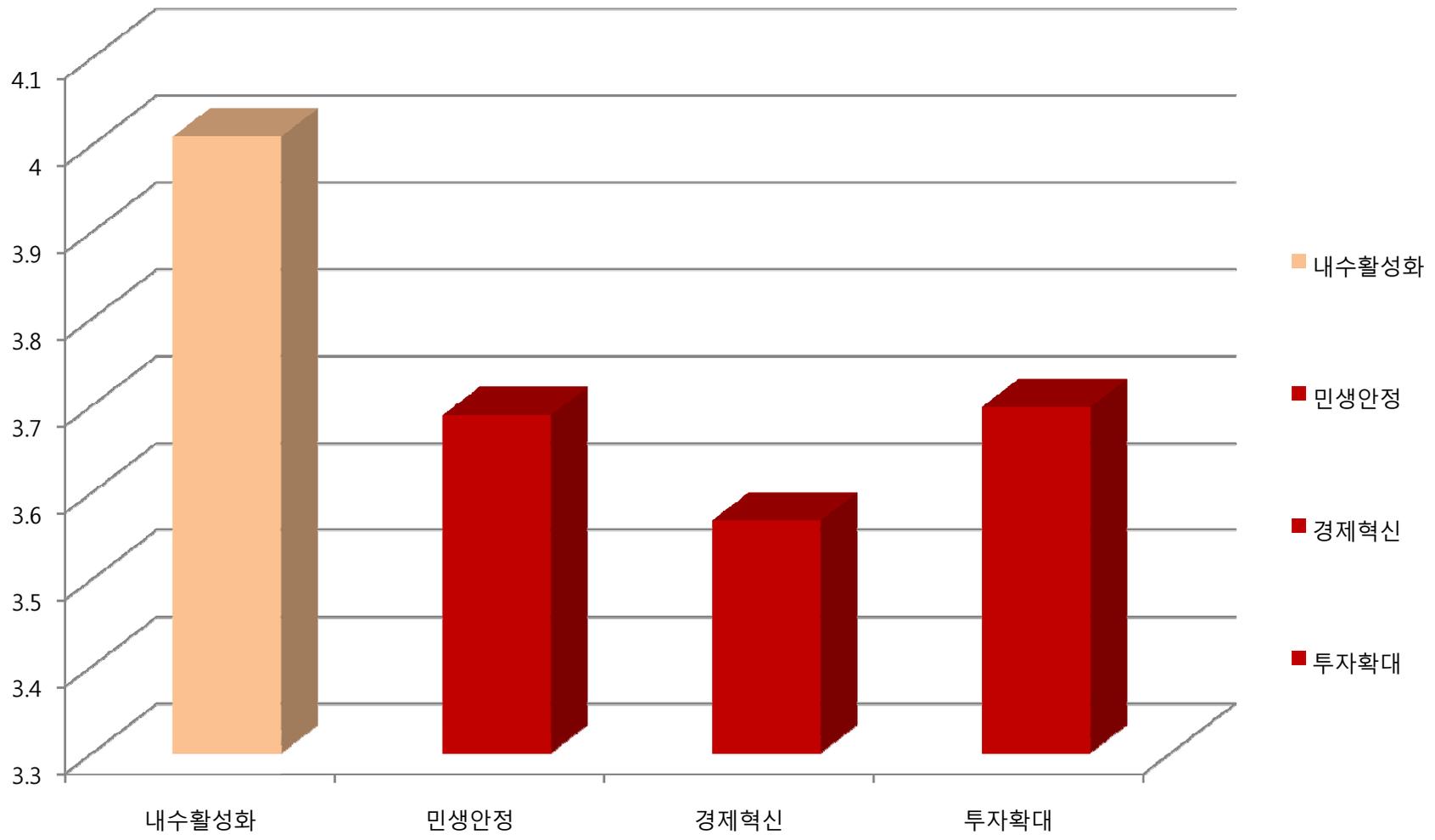
정부경제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



정부경제정책 수행평가

-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
(5점 척도 평균 2.41)
- 내수활력제고에 대해 평가 가장 부정적
(2.27)
-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평가
-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 (2.62)

새 경제팀 정책 평가



새 경제팀 정책 평가

- 한국경제에 비교적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 (3.74)
-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가 많은 평가
- 내수활성화에 대한 후한 평가

2. 한국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경영학자의 진단

한국 경제 당면 리스크 평가

- 고령화 저출산 (46.98%)
- 노사갈등과 양극화(27.91%)
- 안전불감증과 원칙 미준수 (23.72%)
- 북한 및 통일관련 불확실성 (1.40%)

양극화에 대한 해법

- 성장을 기조로 한 점진적 복지예산 확충 (51.63%)
- 부자와 소득상위층을 겨냥한 세제개혁 (30.23%)
- 복지예산과 재분배에 대 중점을 둔 예산편성(14.88%)
- 기타 (3.26%)

안전경영의 강화해법

- 안전설비와 인원투자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제공 (53.49%)
- 안전관련법규의 강화 (23.26%)
- 기업과 재계단체의 노력과 캠페인 (20.47%)
- 기타 (2.79%)

관료집단 정실인사(관피아)에 대한 개혁해법

-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 (66.05%)
- 사회전반적인 정실관행타파와 캠페인 (18.14%)
- 공무원의 이직규정강화 (12.09%)
- 기타 (3.72%)

재벌개혁관련 해법

- 불공정한 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(33.02%)
-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(23.26%)
- 경영활동의 투명성 제고 (22.79%)
-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 회복 (20.93%)

3.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

성장잠재력 회복에 대한 해법

- 일자리 확대정책 추진 (39.07%)
- 규제개혁 (26.98%)
- 경기부양 (17.67%)
- 친기업 정책추진 (8.84%)
- 복지실현 (7.44%)

일자리관련: 통상임금과 제조업

- 통상임금 산정범위 해소방안
 - 노사정 차원의 타협안과 기준제시 (72.09%)
 - 새로운 입법 필요 (19.07%)
 - 개별기업별 해결 (6.51%)
 - 기타 (2.33%)
- 제조업공동화 대처방안
 - 국내투자 및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(42.79%)
 - 기업의 경쟁역량 고양 (25.12%)
 - 규제철폐 (15.35%)
 - 노사문제해결 (12.09%)
 - 과도한 비용상승 방지 (4.65%)

일자리 관련: 기업가정신 회복

- 기업가정신 회복방안
 -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 (59.53%)
 - 창업의식 고취와 창업교육 (23.26%)
 - 창업자에 대한 강력한 보상 시스템의 확립 (12.56%)
 - 기타 (4.65%)

4. 새 경제팀에 대한 제언

새 경제팀 정책 우선순위평가

- 내수활성화 (47.91%)
- 경제혁신 (26.51%)
- 민생안정 (25.58%)

내수활성화 관련 정책 우선순위

- 소비와 투자여건 개선 (66.51%)
- 주택시장 정상화 (14.88%)
- 확장적 거시정책 (10.70%)
- 리스크관리 강화 (7.91%)

내수활성화: 투자와 기업의욕 고취방안

-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(69.30%)
- 안전투자확충 (15.35%)
- 대형투자프로젝트 추진 (10.70%)
- 가업승계지원 (4.65%)

내수활성화: 기업 유보금 과세방안에 대한 제언

- 보완 후 추진이 필요하다 (41.40%)
- 철회해야 한다 (21.86%)
- 한시적으로 도입 추진해야 한다 (19.53%)
- 추진해야 한다 (17.21%)

경제혁신관련 새 경제팀 우선순위

- 공공부문 개혁 (34.88%)
- 규제개혁 (33.95%)
- 경제민주화 추진 (16.74%)
- 유망 서비스업 육성 (14.42%)

민생안정관련 새 경제팀 우선순위

- 청년과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(57.21%)
- 비정규직 처우개선 (21.40%)
- 소상공인과 서민지원 (14.88%)
- 노사정 대화 복원추진 (6.51%)

5. 결론

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

-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비하여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큰 편임
- 장기적으로, 고령화/저출산에 의한 성장잠재력 쇠퇴가 가장 큰 경제 리스크로 인식
- 단기적으로 내수활성화가 급선무,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- 기업 유보금 과세와 같은 정책추진 방법론에서는 신중론 (상당한 수정보완 필요)

우리는 2030년을 대비하는가?

- **이슈별, 상황별로 임기응변적인 경제정책의 구조적 문제점**
 - 경제민주화 → 보편적 복지 → 창조경제 →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
→ 다음은? (정책의 단기적 진화 과정)

(제언)

1) 국가개조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

- 10년-20년 걸쳐 추진할 신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
- 속도 경영의 한계 극복과 2030 년의 대비
- 창조 경제는 여전히 유효한 방향이나,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필요

2) 정책 수립 및 실천 프로세스의 혁신

-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정책입안 시스템의 필요
- “답은 현장에서 찾아야”